

9. 북한경제 연구

북한경제 연구는 분단 이후 40여 년 동안 거의 미답지대와 다름없었다. 그 이유는 역대 남한 정부의 철저한 반공 이데올로기 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수집이나 소유 자체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왔고, 이와 같은 제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들의 매체를 통하여 발표하는 홍보성 자료는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 학자들의 북한 연구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이 불확실한 정보자료에 의한 그들의 연구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다름이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족한 북한 연구의 민간기구는 1971년에 설립된 북한연구소였다. 그 후 극동문제연구소, 동서문화연구소, 아시아문제연구소 등이 발족되어 북한 연구를 하였지만 연구 내용은 정치·군사·사회·문화분야에 치중되어 있었고 경제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에는 비판적 반공 이데올로기가 그 저변에 깔려 있었다.

북한의 경제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분단 40년 만인 1984년부터 KDI가 처음으로 시작했다.

1984년은 최초의 남북 경제회담이 열린 해였고(1985년에도 2차에서 5

차까지 회담이 열렸으나 성과 없이 끝남), 북한에서는 '합영법'을 제정(9월)하여 그동안의 자립경제에 입각한 배타성과 폐쇄성에서 대외무역과 대외 경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해였다.

이런 분위기를 배경으로 연하청(延河淸)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경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1984년 후반에 『남북한의 무역 경합관계 분석』과 『북한경제의 총량주계에 관한 소고』의 연구논문 2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분단 후 처음으로 우리 경제학자에 의하여 시도된 북한경제 연구로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1984년 11월, 최초의 남북 경제회담을 앞두고 회담 준비 멤버인 김기환(金基桓) 박사는 회담자료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KDI에 했다. 이 요청을 받은 KDI는 이미 두 편의 북한경제 연구논문을 쓴 연하청 박사에게 회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케 하였다. 그리고 회담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연하청 박사는 본격적으로 북한경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하청 박사는 뉴욕주립대학교에서 보건경제를 전공하여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77년 수석연구원으로 들어온 뒤 보건기획단에 참여하여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1980년대 초에는 국민경제와 복지연금제도 등 주로 보건복지분야를 연구하다가 남북 경제회담을 계기로 북한경제 연구에 전념하게 된다.

두 편의 북한경제 연구논문을 쓰면서 자료의 벽에 부딪힌 경험이 있는 연하청 박사는 자료 수집을 위해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 가서 하버드대학교 객원연구원으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북한은 국민소득 성장지수는 물론 산업부문별 성장지수도 발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역통계를 알기 위해서 무역상대국이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UN통계국이나 일본 무역진흥회 등 북한과 거래가 있는 나라들의 자료를 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공산권과 북한 연구에 대한 실적이 있는 외국 학자들을 찾아

가서 조연을 받고 그들로부터도 자료를 제공받았다.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를 답사하는 심정으로 1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한 뒤 돌아와서 쓴 연구총서가 1986년 11월에 발간된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이었다.

연하청 박사는 이 책에서 북한경제의 통계 수치를 통한 경제지표의 설명보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과 경제정책의 배경 및 경제정책 운용방법에 대한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남북한 경제 경합관계 분석, 북한경제의 총량 분석,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과 함께 1984년에 끝난 북한의 제2차 7개년 경제개발계획과 1984년에 발표한 '합영법'을 분석 평가하고, 당시의 북한경제 운용체계의 역량과 문제점 등을 체계적·포괄적으로 연구하여 수록했다.

이 연구 내용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1980년대 말부터 남북 경제 교류를 추진하는 데 교과서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KDI의 북한경제 연구는 1990년 '북한경제연구센터'의 발족으로 발전하였다.

1989년부터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나올 때까지 2년 동안에 남북 간에는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의 교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민간 기업에 의한 상품 교류도 상징적인 수준이었지만 성사가 되는 등 대화와 교류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물론 이 기간에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한 독일 통일과 동구 공산국가의 몰락이라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의한 영향도 있었으나 경제 교류를 통한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히는 것도 같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경제를 연구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발족시킨 것이 KDI의 북한경제연구센터였다. 발족 당시의 북한경제연구센터 멤버는 연하청(延河淸) 소장, 전홍택(全洪澤)·고일동(高日東) 연구위원, 홍종덕(洪鍾德)·조동호(曹東昊) 전문연구원 등 5명이었다. 이들 북한경제연구센터 멤버들은 남북 경제 교

류에 대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과 남북 경제통합의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통일원, 경제기획원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산업 및 무역구조, 경제제도 등 북한경제의 실상을 계속 분석, 연구하는 한편, 북한의 개발 전망과 대북 경제 기술협력, 교역, 직간접 투자전략 연구 등 남북 경제 협력방안에 관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적으로도 연하청 박사가 처음으로 북한경제 연구에 도전했던 1980년대 중반과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민주화가 진척되어 북한 문제를 다룬다는 데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없었고, 공산권의 붕괴로 정보의 양과 폭이 그만큼 많아지고 넓어졌다는 점이 달랐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본주의 체제와 경제적 우위를 내세워 북한을 포용하고 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연하청 소장은 북한경제연구센터 발족 직후 남북한 경제협력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영문 연구보고서(*Bridging the Casm: Cooperative Economi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를 작성하여 국내외에 배포하였다.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뒤 한국은행과 금융경제연구소를 거쳐 KDI에 들어온 뒤 곧바로 북한경제연구센터 멤버로 합류한 전홍택 박사는 적극적으로 북한과 경제 교류 협력을 펴 나가는 것만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최상의 방책이라는 이론을 폈고, 1991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실물지표에 의한 북한의 GNP 추정』을 통하여 국내 최초로 실물지표 접근법으로 1990년도 북한 GNP를 273억 달러, 1인당 GNP를 1천 73달러라고 추정하였다.

아이오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일동 박사는 통일비용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1991년 그가 참여한 연구보고서 『남북한 경제관계 발전의 기본구상』에서도 통일비용을 처음으로 추계(推計)해 냈지만 민감한 사항이어서 대외 발표는 하지 않았다. 고일동 박

사 역시 연하청·전홍택 박사처럼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하여 통일을 모색하고 통일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이론적 바탕 위에서 북한경제를 천착(穿鑿)하고 연구를 하였다.

이와 같이 KDI의 북한경제연구센터는 북한경제의 실상 연구는 물론 경제 교류, 대북 경제협력, 통일비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여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북한경제 연구분야에서 학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금강산 관광을 가고 민간 기업이 북한에 생산공장을 짓고 가동을 하는 등 인적, 물적 교류가 현저하게 증가한 현재까지도 북한경제는 최악의 상태라는 사실만 알 뿐 거시경제지표는 물론 예시적인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그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부문에 응하는 수준의 교류이고 협력일 뿐이다.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KDI 북한경제연구센터 멤버들의 연구결과가 보다 높은 단계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근본적인 치유방법을 찾는 연구를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